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주요 일정



**2017.6.2** 안보리,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 기관 4곳·개인 14명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 2356호** 만장일치 채택.

**8.5**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 북한 주력 수출품 석탄,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 중단.

**9.11**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 채택, 원유공급 연400만배럴로 동결·정유제품 절반에 가까운 200만 배럴로 제한 등 '유류 첫 제재', 북한산 섬유제품 해외수출 전면 금지

**12.22** 안보리,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 정유제품의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 원유 공급량 현행 수준으로 알려진 '연간 400만 배럴' 상한선 설정, 해외파견 북한노동자 24개월 이내 귀환 조치



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이어, 11월 29일에는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오늘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더 높여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 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은 '화성-15형'을 신형 미사일로 판단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어졌다. 9월 15일 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했고, 12월 22일에는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는 등 강력한 제재로 대응했다.

대북 제재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귀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물·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 명문화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역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뿐만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유럽 연합(EU)을 비롯한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도 이어졌다. 오랜 우방국과 교류 국가도 북한과 거리 두기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점차 심해졌다.

북한은 11월 29일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끝으로 연말까지 특기할 만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 수능 일주일 연기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났다. 이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은 발생 깊이가 3~7km 지점으로 경주 지진(11~16km)보다 진원이 얕아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만큼 충격이 컸다.

### ■ 포항이 무너져 내렸다... 피해 규모 '경주지진' 5배 넘어

지진이 발생하자 대다수 포항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포항시 북구 양학동, 두호동 등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춰 계단을 통해 집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지진으로 건물 내·외벽이 무너지거나 부서졌고 도로에 금이 갔다. 상수도관이 파손됐고 공장이 부서졌으며 KTX 포항역사 천장이 일부 무너졌다. 포항공대(포스텍) 등 곳곳에 정전이 발생했고 주택과 상가 10여 곳에서 작은 불이 났다.

북구 흥해읍에 있는 한동대는 건물 외벽이, 북구 두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소는 벽체가 떨어져나갔다. 일부 외벽이 떨어져 내리면서 건물 밖에 세워둔 차가 부서지기도 했다. 시내 상가는 유리창이 깨진 곳이 많았다. 이 밖에 집 안에 있던 액자



▲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학교의 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뒤굴고 있다.

나 책이 떨어지거나 마트 물건이 쏟아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포항 인근을 지나는 열차는 한때 서행했다. 대구-포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지진으로 가동되지 않다가 복구됐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 2만7천300여 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었다. 경주 지진(5.8)보다 규모는 작았으나 진앙인 포항 시 북구 흥해읍에서 수 킬로미터 안에 인구가 밀집돼 피해는 오히려 컸다.

포항 시내 초·중·고등학교는 건물이 부서지고 금이 가는 등의 피해로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간 휴업했다. 공공시설은 321건에 252억4천만원, 사유시설은 2만7천535건에 293억7천8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사유시설 가운데 주택 2만5천849채가 크고 작은 피해를 봤고 상가 1천186곳과 공장 163곳도 일부 금이 가고 부서졌다.

지진으로 집이 부서져 갈 곳이 없거나 불안해서 집에 못하고 대피소에서 지낸 이재민이 1천800여 명에 이르렀다. 대피소는 흥해실내체육관, 독도체험수련관 등 10여 곳에 달했다.

### ■ 민·관 한마음으로 피해복구·지원 나서

포항시는 이재민에게 급식 제공 및 의료와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했으며, 피해주민 아이들을 위한 '아이 돌봄방'을 운영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흥해초등학교를 보수했으며, 복구청사와 양덕정수장은 다시 짓기로 했다.

시는 지진 이후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해 공동주택과 전·반파 주택 610가구를 이주 대상으로 분류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흥해읍 대성아파트를 비롯해 환호동 대동빌라 주민들이 이주 대상에 포함됐다.

포항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이 기울거나 부서져 위험 판정을 받은 이재민에게 임대아파트, 전세임대, 다가구 주택을 제공했다. 또 멀리 이주하기를 꺼리는 주민을 위해 흥해읍에 초립식 주택을 지어 보급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이재민에게 최대 1억원의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해 2년간 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 상당 부분을 국고로 지원했다. 또 건강보험료 감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간접 지원도 했다.

전국적으로 구호 성금과 물품도 잇따랐다. 포항시는 2017년 12월 21일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들어온 성금이 모두 360억1천9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포항시는 의연 금품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주택 전파 가구에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 가구에 250만원(세입자 125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으로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 등 56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성금과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피해 주민은 전파에 1천400만원, 반파에 7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지진의 여파로 진앙 주변인 흥해읍 일대를 비롯해 10여 km 떨어진 송도동 주택가 등에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원인 조사를 벌였다. 액상화는 강한 흔들림으로 땅 아래 흙

탕물이 지표면 위로 솟아올라 지반이 순간적으로 액체와 같은 상태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땅을 받치고 있던 물 등이 빠지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포항 5곳에 액상화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진앙과 가까운 흥해읍 망천리 논에서 액상화 지수(LPI)가 '높음' 수준을 보였지만, 나머지 4곳은 '낮음'이나 '없음'으로 나타났다.

### ■ 수능, 일주일 연기…무사히 끝나

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2017년 11월 16일 치를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민·관 합동점검반의 점검 결과 포항지역 12개 수능시험장은 붕괴 위험은 없었지만,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를 봤고, 진앙에서 가까운 북부지역 시험장의 경우 여진 피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포항지역 수험생 5천523명 가운데 북부지역 4개 학교에 배정됐던 수험생 2천45명은 남부지역 대체고사장 4곳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 전날인 22일 한 차례 더 예비소집을 진행했고, 지진에 대비해 수험생과 감독관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국민적 우려 속에 23일 치러진 수능은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만 4차례 발생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됐다.

